

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9월 2차 (2019.9.16~9.30)



주요 현안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위해 재정분야 전문가 머리 맞댄다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함. 이번 포럼은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재정학회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국가 재정과 성평등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에 대해 재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1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31

인권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시 등급 차별·승진배제 말아야!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하여 단순·반복 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와 직위는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등 여성을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한 피진정회사에 대하여 오랜 기간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9.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525>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 질병관리본부는 치매 임상연구 용역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상이함을 확인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차별화된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발표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9.2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936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함.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9.2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969

성희롱·성폭력 사건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돕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만든다

- ☑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문화예술계 자유계약자 포함)에게 분야별(공공, 교육, 민간, 문화예술)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가칭)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개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2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46

여성가족부,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위한 위원회 27일 출범

- ☑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2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47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폐기 찬성 75.6%, 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 ☑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중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 조사 결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다문화·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2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49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9-09-23	아이돌봄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 보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2019-09-2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급여액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 보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2인)	2019-09-2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양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경우 양부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개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일·생활 균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2019-09-19	사업주는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2019-09-26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0. 1. 시행) 개정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개선·보완됨. 그러나 부칙 제4조에서 동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등의 사용 시기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따라서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함.
다문화·결혼 이민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9-09-17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9-09-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몰래 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 방지

다문화·결혼 이민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2019-09-18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15년 11,715건에서 '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2019-09-19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2019-09-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개정한 바 있음. 문제는 2012년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본래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것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또는 신상정보노출 등에 따른 벌칙(제50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또는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제43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이에 현행 양벌규정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4조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함.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보도일	매체명	제목	링크
성 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09.24	이데일리	韓 20대 남성이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이유...“취업난·군복무 박탈감 탓”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1286622623400&mediaCodeNo=257&OutLnkChk=Y
	09.24	한겨레	젠더 갈등, 비겁한 변명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0740.html
	09.23	YTN	CNN “한국의 젊은 남성들, 페미니즘과 싸우고 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909230705481528
	09.23	중앙일보	CNN “한국의 젊은 남자들, 페미니즘과 싸우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83827
	09.23	머니투데이	CNN “한국 남성들이 화난 이유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218162153957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09.25	세계일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사과정부터 심리상담까지 지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0740.html
	09.25	KBS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지원까지 책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9195&ref=A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정책 개선과 발굴(Ⅱ)	09.28	한겨레	남성보다 많이 뛰어들이지만 적게 살아남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276.html#csidxca54aceebc0e8618cf92dfce4b3455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 (수탁과제/ 보도자료)	09.29	세계일보	女임원 많을수록 실적 개선? 일반화 이르지만 대체로 사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29508046?OutUrl=naver

연구자 언론활동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연구자	링크
09.18	서울경제	"女경제활동참가율 19년째 50%...정부·사회 관심으로 개선해야"	김난주 부연구위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ALVODVX
09.20	여성신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9년간 50%대...정부와 국회 지속적 관심 필요"	김난주 부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151
09.21	여성신문	82년생 '김지영'과 '사토유코'	오노 세라 (2019년 젠더리뷰 여름호 투고 외부 연구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27
09.22	연합뉴스	[다문화가구원100만] ②단일민족과 다문화 수용 놓고 갈등하는 한국	김이선 연구위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127900371?input=1195m

유관기관 연구동향

미혼모·부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
-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양육환경의 개선은 차별 없는 출산 및 양육 정책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미혼모·부에 대한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가 미혼모·부의 건강하고 장기적인 자립기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미혼모·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NARS 현안분석 , 2019.09.19]
<http://www.nars.go.kr/brdView.do?brdSeq=26028&cmsCd=CM0155>